

# 국회 최대 쟁점 떠오른 중대재해법...이번주 통과될까

### 오는 8일 임시국회 종료...‘속도전’ 불가피

### 사업장 규모별 법적용시기 놓고 ‘난항’ 예상

국회가 지난주 본격적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속도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지난달 29, 30일 이틀 동안 법안을 검토했다. 여야가 중대재해법 논의의 위해 한 테이블에 마주앉은 것은 지난해 6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발의한 뒤 반년만이다.

국회에는 강은미안 외에 박주민·이탄희·박병계 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 정부안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유관 부처 간 협의 끝에 법무부가 마련한 단일안인 정부안을 토대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이번주 ‘밤샘토론’을 불사해야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법 제정을 촉구하며 3일인 이날까지 24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처벌 대상 등 쟁점이 산적해 있어 조항마다 ‘산 넘어 산’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까지 조정된 내용과 남아있는 쟁점을 짚어봤다.

#### ◇논의 시동 건 첫째날, 중대재해 개념 합의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첫 법안소위는 중대재해의 개념을 합의하는 데 그쳤다. 오전부터 이어진 회의 끝에 여야는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 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침사 등의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기로 했다.

이는 박주민안에 담긴 내용을 차용한 것으로, 정의당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의 전체 체계상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개념을 분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의원들이 제출한 기존안보다 정부안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발의안이 사망자 기준을 ‘1명 이상’으로

정의한 반면 정부안에는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1명 이상’으로 할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날 소위에는 제계와 노동계 측 유족들이 참석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와 고(故) 이한빛PD의 부친 이용관씨는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점을 다르게 두고 원청 처벌이 약화된 부분을 비판했다.

반면 경제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경영책임자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가속 폐달 밟은 둘째날, 책임 대상·적용기준 결정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두 번째 소위는 전날보다 진전된 합의를 내놨다. 법 적용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책임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확장했다.

책임 대상인 ‘경영책임자’ 개념이 확대된 데는 야당 주장이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부에서 빼졌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를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되살렸다”며 “정부안을 보면 ‘경영책임자 셀프 의무 부여’가 있는데 가담하지 않아서 삭제시켰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과 그에 준해 안전·보건 의무를 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역시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해 소위는 5일 재개될 예정이다. 백 의원은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중요하고 논쟁적인 것은 많이 정리됐다. 1월5일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회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진짜 쟁점은 이제 시작...5일 마무리 가능할까

사업장 규모별로 법 적용 시기를 나누는 문제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그래서 매년 2000여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지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법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영세업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중대시민재해’에 카페, 목욕탕 등의 공공이용시설이 포함된 것을 두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공중 안전 확보를 위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면책 범위도 쟁점이다. 의원안은 ‘결재권자인 공무원’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정부안은 형법상 직무유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무원

을 처벌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담게 되면 공무원이 산업현장에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 행정을 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정한 정부안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의당안은 ‘3배 이상 10배 이하’, 민주당안은 ‘5배 이상’을 규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안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제계가 과도한 배상액이라며 ‘손해액 3배 이하’를 주장하고 있어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이재명, 새해 대선후보 각종 여론조사 선두

KBS·SBS·MBC·한겨레·서울신문 등 10곳 중 8곳 선두

매체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비율 (%)	2021년 신년 작거대선 조사 종합 (조사일 12월 26일 이후)			비고	
				1위 (주자, %)	2위 (주자, %)	3위 (주자, %)		
서울신문	현대리서치	전화면접	71	12월 30일	이재명 26.7	윤석열 21.5	이낙연 15.6	
SBS	업소스	전화면접	90	12월 30일	이재명 23.6	윤석열 18.5	이낙연 16.7	
MBC	코리아리서치	전화면접	100	12월 30일	이재명 23.6	윤석열 18.2	이낙연 17.5	
KBS	한국리서치	전화면접	100	12월 29일	이재명 23.8	이낙연 17.2	윤석열 15.4	
동아일보	리서치앤리서치	전화면접	90	12월 29일	이재명 21.7	이낙연 18.9	윤석열 18.2	
한겨레	케이스모니터리서치	전화면접	100	12월 29일	이재명 24.6	윤석열 19.3	이낙연 15.4	
조선일보	칸타리퍼블릭	전화면접	80	12월 29일	이재명 23.8	이낙연 17.2	윤석열 15.4	
KSOC	KSOC	전화면접	80	12월 26일	이재명 23.4	이낙연 16.8	윤석열 15.0	
뉴스1	리얼미터	자율응답	80	12월 28일	윤석열 25.1	이낙연 20.0	이재명 19.8	
데일리안	알앤비	자율응답	100	12월 29일	윤석열 23.5	이재명 21.2	이낙연 19.3	
					이재명 22.8	윤석열 17.2	이낙연 16.8	1위 이재명, 2위 윤석열과 5.3%p 격차
					윤석열 22.9	이재명 17.2	이낙연 16.8	3위 윤석열, 2위 이재명과 3.8%p 격차
					이재명 22.4	윤석열 18.6	이낙연 17.4	1위 이재명, 2위 윤석열과 3.8%p 격차

차기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사가 새해 들어 발표된 각종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10곳 중 8곳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연초부터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KBS가 여론조사기관인 (주)한국리

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95% 신뢰수준에 ±3.1%p)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1.7%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6.9%, 윤석열 검찰총장이 13.8%로 뒤를 이었다.

SBS가 여론조사기관 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내년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들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는지’ 묻는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3.6% 지지율로 가장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18.5%, 이낙연 민주당 대표 16.7%를 기록했다.

MBC가 여론조사업체인 코리아

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95% 신뢰수준에 ±3.1%p)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 20.8%, 윤석열 검찰총장 18.2%, 이낙연 대표 17.5%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9일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3.8%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뽑았다. 현대리서치 연구소가 서울신문 의뢰로 지난달 28~3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가장 높은 26.7%의 지지를 받았다.

## 野 “세월호 선장과 文 뭐가 다른가”

서울 동부구치소 내 집단감염으로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빗대 비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진심은 없고 정쟁을 위한 막말만 남았다”고 맞섰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하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려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에 빠트린 정부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인권과 생명의 가치는 사람에게 따라, 진영에 따라 다른 선택적 가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

에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세월호 국가 책임’ 떠올려보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월호 판례를 서울 동부 구치소의 코로나 집단감염 참사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문 대통령과 추 장관 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말이 없다.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에서 재소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